

반도체·자동차 타결위해… 사과·소고기·쌀 협상 카드로

산업부, 韓美 관세협상 전략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농축산물 추가개방 의중 내비쳐

소고기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쟁점
사과, 과학적 검역기준 통과해야

정부가 사과 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반대 급부로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 14일 발언 이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는 비관세장벽 완화도 포함돼 있다. 수입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고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확대 압박을 받는 품목으로는 소고기, 사과, 쌀 등이 거론된다.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들여올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나온 식용 부위만 수입하도록 위생 조건을 제정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더해, 높은 소일수록 광우병 발생 확률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미국과 접점을 찾았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고, 국내산 축산물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국내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월령제한 해제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과의 경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농업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우리 정부에 사과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현재 2단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사과의 수입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누군가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해서 단계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품목이다. 한국의 쌀 수입 규제는 비관세장벽의 한 단면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쌀 시장 개방은 20년간(2015년까지)의 유예를 적용받았다. 이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연간 40만8700톤(t)을 의무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국 배정분이 13

만2304t이다. 해당 물량은 관세 5%를 적용하고 그 외 추가분은 513%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양국 간 합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WTO 회원국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 뒤 이해관계국의 이의 제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린다.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5% 관세가 적용되는 TRQ 쿼터국인 4개국 동의도 얻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농업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상압력을 가하는데, 고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농업을 바둑판의 사석(상대편에 잡혀 죽은 돌)으로 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연제 기자 kys@metroseoul.co.kr

美 AI산업 고도화… ‘K-변압기’ 현지공략

미국 트럼프 행정부

AI·에너지에 920억 달러 투자 계획
전력기기 업계, 추가 성장동력 확보

미국이 인공지능(AI)·에너지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고압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기기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I산업 고도화와 전력망 재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변압기 등 핵심 인프라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에너지, 혁신’ 서밋에서 AI와 에너지 분야에 총 920억달러(약 127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560억달러,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360억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구글, 블랙스톤, 코어웨이브 등 20개 주요 에너지·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

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변압기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전력기기 업계는 이번 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이미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더해진 셈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HD현대일렉트릭의 수주잔고는 8조4939억원, 효성중공업 중공업 사업부문 수주잔고는 12조4253억원, LS일렉트릭은 3조88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 내 입지도 넓어지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변압기 수출 비율은 지난 2010년 32.3%에서 지난해 63.3%로 게 늘었다. 미국 전력망이 오래돼 미국 변압기의 약 66%가 교체 대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력기기 업체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지속하며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는 분위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해왔다. 최근에는 1850억원을 투입해 북미 공장 증설 계획도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미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던 일본 미쓰비시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4650만달러(약 645억원)에 인수해 2020년부터 가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두 번째 증설에 돌입한 상태다. LS일렉트릭 또한 미국 텍사스주에 생산·연구 시설인 배스트럽 캠퍼스를 준공해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 기기를 생산할 방침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 발표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전력 인프라 확충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이 전력망 확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자국의 AI 패권 전략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의 AI 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를 가장 먼저 줄인다. 경기가 위축되며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주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의미다.

JP모건은 “비농업 고용이 표면적으로 양호해 보이지만, 실업률의 점진적 상승은 고용악화를, 이민 급감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가하게 할 것”이라며 “경제활동이과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의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인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 기준 14만7000명 증가했다.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해 12월말 25만6000명에서 올해 1월 14만3000명, 2월 15만1000명, 3월 22만8000명, 4월 17만7000명, 5월 13만9000명, 6월 14만7000명이다. 3월을 제외하고는 10만명대로 둔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인건비

“여름 인플레이션 지표가 정책경로 좌우”

>> 1면 ‘美 6월 물가상승’서 계속

JP모건 마이클 페를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름 동안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의 정책경로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어 올해 금리인하 카드를 안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

정이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공급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량 중 중국산이 82.7%에 달한다.

SK온은 국내산 원료 조달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산 수산화리튬은 I 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을 충족해 미국산 배터리 원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SK온은 지난 2022년 도입된 IRA에 대응하기 위해 원소재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다. 2024년 6월 미국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협력 양해각서, 같은 해 2월 미국 웨스트위터와 천연 흑연 공급 계약, 2022년 11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계약 등을 체결했다.

국내산 원료를 쓰면 통관비, 운송비 등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앞서 SK온은 지난 2024년 11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국내산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차현정 기자



SK온 박종진 전략구매실장(왼쪽),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김윤태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다.

/SK온

SK온-에코프로이노,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

‘공급망 다변화’ 구매 경쟁력 확대
미국 IRA에 선제적 대응하기로

SK온이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국내에서 확보한다. 공급망을 다변화해 구매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개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국내산 수산화리튬 최대 6000톤을 공급받는다. 전기차 약 10만 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국내 양극재 공장을 거쳐 SK온 미국 공장에 최종 공급되는 방식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국내 대형 셀사에 수산화리튬을 공급한데 이어 SK온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고객 다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향후 2~3년간 수산화리튬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연내 맺을 예